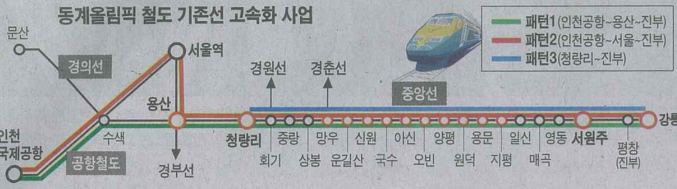


인천공항~평창 98분대



올림픽 주 개최지 있는 KTX 열차 고속화 내년 6월 준공
 1,539억 투입 최대 시속 230km... 수송 편익 극대화 기대
 청량리~평창 진부는 58분대 돌파... 하루 51편 운행 예정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서울과 평창 진부가 KTX 열차로 1시간 내 거리로 좁혀진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인천국제공항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주 개최지를 잇는 최대 시속 230km의 KTX 열차 운행을 위한 고속화 사업을 통해 내년 6월부터 118분이 소요되던 인천공항~평창(진부) 구간 운행 시간을 20분 단축, 98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청량리와 평창 진부는 1시간 이내인 58분 만에 돌파된다고

덧붙였다. 평창올림픽 때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선수 및 관광객 수송을 위한 대표적인 SOC사업은 수도권 철도 노선 고속화 사업과 원주-강릉 복선전철 2가지다. 1,539억원이 투입되는 철도 노선 고속화 사업은 1, 2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1단계로 올 연말 청량리역과 망우역 구간내 개량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달부터 본격화한 2단계 공사는

신경의선(수색~용산), 경원선(용산~청량리), 중앙선(청량리~서원주) 구간의 일반 열차용 분기기와 신호 시스템(ATS)을 고속열차 주행에 적합한 노스기동 분기기와 고속열차용 자동 정지 장치인 ATP신호 시스템 등으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1, 2단계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중앙선 고속 철도는 청량리~서원주 36분, 원주-강릉 복선전철 서원주~평창 진부 구간 간 22분이 소요된다. KTX열차는 하루 51편이 운행 예정이다. 인천~서울~청량리~진부가 8회, 인천~용산~청량리~진부가 8회, 청량리~진부가 35회다. 원주=유학렬기자 hyoo@kwnews.co.kr

/ 인천공항~평창 고속철도 내년 6월 준공 /

서원주~강릉 불과 35분 ‘철의 실크로드’ 시대 연다

원주-강릉 복선철도와 연계되는 수도권 철도 기존 노선 고속화 사업은 철도를 통한 강원발전의 ‘실크로드’ 시대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창올림픽의 대표적인 철도 분야 SOC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대량 물류와 인적 교류를 촉발, 원주와 횡성, 평창, 강릉 등 노선 경유지역의 관광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이 환동해권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고, 동해안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도 이끌 수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년 6월까지 모든 고속화 작업을 마치고 내년 말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연결해 운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내년 7월께 사실상 모든 공사를 마치고

구간별 시험 운행 등 마무리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중앙선 청량리~서원주는 36분이면 도착한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서원주-진부는 79.3km 구간에 22분이 소요되고 진부-강릉 41km 구간에 13분이 걸린다. 서원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데 35분이면 된다.

3조9,400억여원이 투입돼 10개 공구로 나눠 진행 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태백을 거쳐 강릉으로 운행하던 영동선 255km에 비해 142km가 단축된 113km만 이동하면 된다.

노병국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 서울과 강원도 영동을 잇는 철도망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핵심수송대책을 넘어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유학렬기자 hyoo@

인천~평창 진부 철도 고속화 순항

1단계 공정률 47%... 2단계 이달 착공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본부장 이현정)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인천공항~평창 진부 구간에 KTX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존 운행선 고속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속화 사업은 1,2단계로 나뉘어 진행 중으로 1단계인 청량리역~망우역 구간내 개량 공사가 현재 47%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연말 완료될 예정이다.

2단계인 신경역선(수색~용산)·경

원선(용산~청량리)·중앙선(청량리~서원주) 구간 고속화 사업은 이달부터 본격 추진돼 내년 6월 완공된다.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인천공항~평창 진부 구간의 이동시간이 당초 118분에서 20분 줄어든 98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청량리~진부 35회, 인천~서울~청량리~진부 8회, 인천~용산~청량리~진부 8회 등 하루 총 51편의 열차 운행이 가능해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 명복을 빕니다

◆박도영 (46세·홍천늘푸름 한우 프라자 이사)씨 별세, 김명숙씨 남편상=9일 별세 △빈소 흥천군장례식장(하오안리)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장지 흥천군공설묘원

봉안당 △연락처 010-4159-9971

◆신희호 (79세)씨 별세, 유대진(LH강원본부장)씨 모친 상=8일 별세 △빈소 분당서울대병원 2층 3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양평 선영 △연락처 258-4001

강원상의협의회장 김대호 현 회장 유임

강원도상공회의소 협의회장에 김대호(사진) 춘천상공회의소 회장이 연임됐다.

강원도상공회의소 협의회는 9일 동해상공회의소에서 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태백·속초 등 7개 상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강원도상의협의회를 갖고 김대호 현 회장을 연임키로 합의했다.

도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지난 제40차 회의에서 회장 임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춘천·원주·강릉 등의 순으로 협의회장 직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대표성과 업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김 회장 연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협의회장도 현 이해규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유임됐다.



임기는 회장·부회장 모두 2년이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중앙과의 협력차원에서 1년씩 하기보다는 장기간 협의 회장직을 맡는 것이 옳은 방향"

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국립한국문학관 춘천유치 지지 성명서 발표와 함께 △동해안 군 경계철책 국비지원 △제천~삼척간 등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영동고속도로 시설개량공사 조기 완공 △대한석탄공사 장성, 도계 광업소 폐업 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청와대, 강원도 등 5곳에 제출했다. 동해/홍성배·강정규

한라 한진중 중흥건설 태영 현대산업개발

대기업 규제 '굴레' 벗어난다

자산기준 5조→10조로 상향
25개 민간 기업집단 제외
LH·도공 등 공기업도 빠져

현대산업개발, 태영, 한라 등 25개 민간 기업집단과 한국도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공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일괄 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을 더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편

우선 공정위는 계열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 2008년 5조원 기준이 도입된 이후 그동안 GDP가 49.4% 증가하는 등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했지만 지정기준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기업들의 규제 부담도가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정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자산총액 8조1290억원 규모의 한라와 한진중공업(7조7970억원), 중흥건설(7조6030억원), 태영(6조8410억원), 현대산업개발(6조4240억원)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된다.

공정위는 또 공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02년 이후 공기업집단 지정 이후 공기업 공시시스템인 '알리오'가 개설된 데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정부·국회 제출, 출연·출자기관 설립 시 정부 사전 협의 등 공기업집단에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LH를 비롯해 도로공사, 수자



20대 전반기 국회의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選) 의원인 정세균(서울을 중로) 의원이 9일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정 의원은 이날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 의장이 회의진행을 알리며 의사를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4편

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대기업집단에서 일제히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에서 빠진 이들 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행사 이익권 제한 등의 대기업집단 사전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부屬의 부당 이전 차단을 위한 중수일가 사의권취 규제와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시 의무 등 사후규제는 현행 5조원 기준이 유지된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일괄 상향으로 이 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도 모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 중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전기사업법 등 36개 원용 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3년 주기로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3년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정기준 일괄 상향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

민간투자 '숨통'... 지자체 건설공사 참여 길 넓어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함께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도 동시에 적용된다. 특히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 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모든 대기업집단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일부 하위 기업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 자산총액 1위인 삼성(348조2260억원)과 5조원을 갓 넘은 카카오(5조880억원)에 같은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GDP 증가율과 지정기준 자산 증가율, 최상위와 최하위 기업집단 간 자산 규모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지정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자산 규모가 10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25개 민간기업집단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는 건 그동안 받아왔던 대기업집단 규제가 일괄 면제된다는 얘기다.

우선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집단과 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민간투자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자 '30%룰' 걸림돌 제거
계열사간 공동수급제
구성 제한도 받지 않아

기존 중소·중견기업들
수혜 축소 우려도 제기

대기업집단에는 공정거래법상 '30%룰' 규제가 적용된다.

'30%룰'은 대기업이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한 규제로 대기업 입찰에서는 민자 법인이 계열사로 편입되면 품점 불리기라는 우려가 따라붙어 민간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공정위가 지난해 건설사가 민자 SPC의 인원구성·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 계열사 편입을 유예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계열사 편입 유예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올 들어 민간투자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

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은 물론 현재 자산 규모가 5조원에 바짝 다가선 기업집단들이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면서 민간투자에 나설 만한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계열사 간 공동수급제 참여 제한이 해제되고 기업집단 소속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거래량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대기업집단 제외에 따른 규제 일괄 면제로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하위 기업집단의 성장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기존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집단에서 빠진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으면서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은 61개 수준에 불과하고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더라도 곧바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어렵다며 기존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남기자 knp@

기체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경기도의회 '줄속 추진' 논란

4월 국내건설수주, 지난해보다 11% 증가

건협 발표, 12조303억원 민간·건축부문이 견인

지난 4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발표한 국내건설 수주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수주액은 12조30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0조8505억원)보다 10.9% 늘었다.

국내 건설수주액을 발주부문과 공종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87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4% 감소했다.

공종별로 토목은 철도·도로·토지조성 공종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38% 줄었다. 주요공사는 △창원시 우회도로공사(제2안민터널) △동해항 3단계 방파제 공사다.

건축은 공공주택 및 학교·관공서 건

축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43.2% 감소했다. 주요공사는 △원주~강릉 철도 건설 만종역사 신축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본사사옥 신축공사 등이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9조9433억원으로 작년보다 34.2% 늘었다. 공종별로 토목은 도로(민자) 및 토지조성 공종 실적 확대와 기저효과로 작년보다 124% 늘었다. 주요공사는 △부산 내부순환 도로 고속화도로 △제주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토지조성) 등이다.

건축은 주택신축 및 상업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0.2% 증가했다. 주요공사는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PF사업 △창원 중동 유니시티 1블록 신축공사 등이다.

4월 국내건설 기성액은 작년보다 16.2% 늘었다. 공공은 3.7% 감소, 민간은 25.6% 증가했다. 공종별로 건축은 23.5%, 토목은 3.3% 늘었다.

한상준기자 newspia@

아하! 그렇구나

건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건설 공동수급은 관급공사계약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회계에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민간공사계약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고시인 '공동도급운영규정'에서 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나뉘어 있고, 대법원은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다수). 그런데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민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공동수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민법상 조합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고,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할 때와 계약 내용 및 권리관계를 해석할 때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하고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을 상대로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청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제3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채권으로써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에 세무서가 공동수급체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것

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의 채권자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다른 구성원이 제3자 이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 명시적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 약정이라고 인정될 때도 마찬가지다.

개정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도급인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별로 별도 기재한 각자의 거래계좌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였으며,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행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2. 5. 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이은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지자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경쟁 '후끈'

국도교통부가 공모하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경쟁이 불붙었다. 1000억원대 대규모 프로젝트로, 건립 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위촉된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데다 체험·관광 자원으로 관광객 유치의 효과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도부는 2014년 국립철도박물관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후보지 선정을 받았다. 당시 16곳이 선정됐다.

지난해 11월 국도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최적 후보지 선정용역'에 들어가면서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4월 국도부가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만 신청하라는 방침을 정하면서 후보지가 11곳으로 줄어들었다.

지자체들이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1000억원의 국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국도부는 5만여㎡의 터에 2만여㎡의 박물관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에는 철도 입

1000억대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만으로도 지역경제 도움
관광객 유치 효과까지 기대
원주·포항·나주 등 11곳 신청

체 체험영상관, 철도역사문화 전시관, 철도산업 과학기술관, 어린이 철도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다.

이 박물관이 들어서는 지역은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좋은 체험·관광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원주, 경기 의왕, 충북 청주, 대전, 세종, 전북 군산, 전남 나주, 경남 창원, 울산, 경북 포항, 부산 등 무려 11곳이다.

청주시는 철도박물관 유치 TF를 구성해 후보지인 오송에 무가선 트램, 철도완

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철도 종합시험선로 등이 들어서는 미래 철도 인프라가 집적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의 분기역이라는 점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왕시 역시 지난해 12월 TF를 구성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총동원해 유치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왕시는 국내 유일의 '철도 특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전시 역시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해 50만명 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후보지인 대전 동구에서만 20만명이 서명부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박물관 유치를 위한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원주는 중앙선 철도시설인 현 원주역사 부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철도 및 시설물을 활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곳이 박물관의 적합지라는 점을 공략하고 있다.

포항시는 포항역사가 1945년 준공된 후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건축사적 의미가 높아 2013년 코레일이 철도 기념물로 지정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북도는 청도군도 박물관 유치를 희망했지만,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한 포항을 '대표선수'로 내세웠다.

부산시는 진구 가야동의 미군 잉여재산 처리장 부지를 후보지로 정했다. 기존 철도시설 활용도가 높고 배후 도시를 갖춘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산단에 KTX 고속열차와 각종 철도를 제작·수출하는 현대로템이 있다며 후보지 신청을 했다.

국도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 예정지를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현재 진행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최적 후보지 선정용역을 통해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